

제 2장 고성의 통신

제 1절 정보통신의 발달사

1. 총 설

통신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신호 체계라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의 시초부터 고도의 정보체계를 갖춘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신의 역할과 존재는 인류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한국은 한국우정 1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우편사업은 1884년 음력 3월27일(양력4월22일) 우정총국(郵政總局)을 개국하고 한성(서울)과 인천에서 우편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출발했다.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러했듯이 우편 130년사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정총국은 개국한지 20일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그 뒤 우편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11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1895년 한성과 인천간에 우편사업을 재개했으나, 조선 정부의 극심한 재정난과 일본의 간섭으로 지지부진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다만 임시우체사제도(臨時郵遞司制度)의 실시로 단기간에 전국 우편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00년 우편과 전신 등 통신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로 통신원(通信院)이 발족하면서 우편사업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했다. 『우체사관제』와 『국내우체규칙』 등 법령을 개정하고 별분전제도(別分傳制度) 등 새로운 우편제도를 도입했으며, 우체엽서를 발행하는 등 우편사업의 발전기틀을 다져 나갔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우편물의 철도체송도 실시했다. 우무학도(郵務學徒)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식 교육기관인 우무학당을 설립했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졌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그해 4월 한일통신기관협정의 체결을 강요해 우리나라 통신권을 강탈했다.

일제 식민지 치하 35년은 통신 암흑기였다. 우편과 전신·전화등의 통신수단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강화를 위해 이용됐고, 우편업무와 함께 우체국에서 취급하게 된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 역시 일제의 전쟁비용 조달용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우편과 전신·전화 등 통신사업은 국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제공됐다기 보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으나 전승자로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반할 점령해 군정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토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으며, 우편사업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미군정청은 정부의 재정난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2년 동안 우체국을 67개국이나 줄였다. 광복 당시 남한의 우체국 수가 692개국이었으나,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체국이 문을 닫은 것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전란에 휩싸였으며, 3년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남한 통신시설의 80%가 파괴됐다. 이후 1950년대는 전쟁 중에 파괴된 통신시설을 복구하기에 급급한 기간이었다. 광복 당시 692개국이던 남한의 우체국 수가 1960년에도 691개국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나라 우정 130년의 역사에서 전반기에 해당되는, 1884년 우정총국 개국에서 1961년에 이르는 77년은 시련의 기간이었다면, 후반기에 해당되는 1962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53년은 앞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희망과 전진의 기간이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전진과 발전이 가속화된 것이다.

130년에 걸친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역사는 제1기 우정사업 창시기(1884년 우정총국 개국에서 1905년 통신권 피탈까지), 제2기 우정사업 암흑기(1905년 통신권 피탈에서 1945년 8·15 광복까지), 제3기 우정사업 재건기(1945년 8·15 광복에서 1961년까지), 제4기 우정사업 발전기(1962년 제1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 실시에서 1981년까지), 제5기 우정사업 도약기(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에서 2000년 우정사업본부 출범까지), 제6기 우정사업 독자경영(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의 발족 이후)등 여섯 시기로 나눌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 우정사업이 발전해온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前 使 (1885년 이전)

근대적 우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통신방식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역제(郵驛制)였다. 전국을 연결하는 지방 곳곳에 역을 설치해 놓고 말 또는 도보로 정보를 전달하는 우역제는 중앙정부의 명령하달, 지방 관청의 보고, 사신 및 관원의 출장지원, 관물의 수송 등의 용도로 이용됐다. 우역제는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배계층의 통치를 위한 제도였다.

우리나라 우역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으며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나타나며 소지마립간 9년(487년)3월에 “비로소 사방에 우역(郵驛)을 두고 우역을 맡은

관청에 명해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했다” 고 기록하고 있으며, 신라 시대에 우역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내물마립간 때부터 시작된 왕권 강화에 의한 고대국가로의 발전을 들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우역제도의 실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듬해인 669년 당의 이적(李勣)이 고구려의 고토에 도독부와 주현을 설치한 기록에서 국내성의 위치를 평양성으로부터 17역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고구려에도 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호족 세력을 왕권으로 흡수해 귀족정치체제를 수립하고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역제를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6과체제(六科體制)로서 1019년(현종10년)에 전국에 151개역을 설치해 역로(驛路)를 편성하였으며, 이후 22역도체제(驛道體制)로 바뀌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목(主牧)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소속되는 이중적인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의 역은 주목의 읍사(邑司)를 구성하는 향리, 역사(驛司)를 구성하는 역리와의 지배·복속 관계를 매개로 하여, 주목에 소속되는 하나의 행정기구이기도 했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 역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통신기관이었다. 조선시대 우역제의 골격은 15세기 성종대에 완성된 헌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이는데, 그 설치현황은 41역도에 543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걸어가서 전하는 보전(步傳)을 우(郵)라 하고, 말을 타고 전하는 마전(馬傳)을 역(驛)이라 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마전으로 통신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이 일반적이었다. 이 역무(驛務)를 담당하는 사람은 역리, 역노비, 즉 역호(驛戶)들이었으며, 이들 역시 봉건적인 신역제(身役制)에 구속되어 역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신분은 세습제에 의해 자손대대로 계승됐다.

우역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도 소식을 원거리로 전하는 통신수단은 있었다. 말을 이용해 소식을 전하는 우역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소리나 깃발, 불, 연기 등 자연현상을 통신수단으로 이용했는데 그중 변경에서 발생한 위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통신 수단으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올려 신호를 보내는 봉수제와 변경에서 생긴 화급한 소식이나 공문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파발제가 있었다. 봉수제는 전국의 산꼭대기에 봉수대를 만들어 놓고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나라의 변경에서 발생한 위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제도였다. 백성들의 통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군사통신용으로만 사용했다.

조선시대 고성의 봉수체계로는 미륵산봉수→ 우산봉수→ 좌이산봉수→ 천왕점봉수→ 곡산(구절산)봉수였다.

봉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등장한 것이 파발제였다. 파발제는 인마(人馬)를 사용해 변경의 위급한 상황이나 화급한 공문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제도로, 우역제에서 물품의 운송 기능 등을 제외하고 통신 기능만을 살린 제도다.

조선시대 고성의 역은 배둔역, 송도역, 구허역이 있었다.

3. 制 1 期 (1884~1905년)

1876년 이른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되면서 조선은 바깥 세상에 문을 열게 됐고, 서구의 새로운 문명을 접하면서 개화운동(開化運動)이 일어나게 되어 조선사회의 봉건적 사상과 풍속을 파타하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고자 한 근대적 개혁운동으로 조선의 정치·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1881년 일본의 근대화된 문물과 제도를 시찰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은 우편과 전신 등을 눈 여겨 보았다. 그 결과 조선정부는 1882년 12월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 우정사(郵程司)를 설치해 우편과 전신, 철도 등 새로운 문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근대적인 통신제도를 실시하려는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1881년 조사시찰단의 조사로 일본의 우편제도를 살펴본 선각자 홍영식(洪英植)은 1883년 보빙사(報聘使) 부사(副使)로 미국을 시찰하면서 근대 우편제도의 효용성을 절감했으며, 고종을 설득해 우정총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본 및 구미 각국의 공사관에 우정총국 창립을 통보하는 한편, 「우정총국신설개량장정(郵征總局新設概略章程)」과 「대조선국우정총국직제장정(大朝鮮國郵征總局職制章程)」 및 사무장정(事務章程)」 등 기본 법규를 제정하는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거쳐 1884년 10월 1일(양력11월18일) 한성과 인천에서 우편업무를 개시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우편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우정총국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해 10월17일(양력12월4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석상에서 김옥균 등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정총국은 업무를 개시한 지 20일만에 문을 닫게되어 근대 우편제도를 실시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한 동안은 재래 통신방식인 우역제로 되돌아 갔다.

1893년 8월 17일(음력9월26일) 조선전보총국(朝鮮電報總局)을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개편해 우신(郵信근)을 설치하라는 고종의 전교에 따라 우편업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됐다. 조선전보총국은 당초 남로전선(南路電線)을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건설하기 위해 1887년 3월에 설치했던 것인데, 여기에 우편업무를 추가해 전우총국으로 발전적인 개편을 하게된 것이다.

그 후, 전우총국은 1894년의 갑오개혁과 1895년의 을미개혁 등을 거치면서 역체국(驛遞局)과 전신국(電信局)으로 분리됐다가,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에 다시 농상공부 소속의 통신국(通信局)으로 개편됐다. 이어 「국내우편규칙」, 「우체사관제」 등이 제정되고, 그해 6월1일(7월22일)다시 한성과 인천 간에 우편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비로소 우편사업이 재개됐다.

1895년에는 한성과 인천 등 8개 우체사가, 다음해인 1896년에는 나주, 평양 등 17개 우체사가 속속 개설됐다.

한편, 1897년에는 만국우편연합(UPU)총회에 한국 대표를 파견해 가입절차를 마쳤고, 1900년 1월 1일부터 국제우편업무를 실시했다. 우편망의 확장과 취급업무의 확대에 힘입어 1900년 3월 그동안 농상공부 소속이었던 통신국을 통신원(通信院)으로 개편함으로써 통신사업을 독립기구에서 관할하게 됐다.

그 뒤 러일전쟁의 전세가 결정적으로 우세하게 된 일제에 의해 1905년 4월 《한일통신기관협정(韓日通信機關協定)》의 체결을 강요해 통신권을 빼앗겼으며, 그 해 7월에는 통신기관을 모두 접수했다. 이로써 한국의 우편사업은 재개된 지 10년만에 일제의 손에 넘어가는 비운을 맞게 됐다.

4. 制 2 期 (1905~1945년)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을 체결해 우리나라 통신권을 강탈한 일제는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그 밑에 통신관리국(通信管理局)을 설치해 한반도의 통신사업을 마음대로 운영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한국의 통신사업은 일제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수모를 겪었다.

일제가 우리 통신기관을 강탈한 것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1910년 9월29일 일제는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강요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식민지 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질 무렵으로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인데, 이 시기 일제는 군사력을 앞세운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을 감행해 의병을 제압하고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는 등 무단통치를 통해 식민지 통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 기간에는 한국 통신기관과 우편제도가 일본식으로 개편되고 우편기관 관리자는 물론 대부분 직원까지 일본인으로 교체됐다. 통신의 최고관리기구인 통신관리국은 한일합방 직

후 조선총독부 통신국(通信局)으로 개편됐는데 1912년 4월 다시 체신국(遞信局)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식민지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식민지 우편망은 급격히 확대됐는데, 이는 한국인의 이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무렵 한국에 급격히 침투하기 시작한 일본인 거류민의 이용 증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또한, 우편환제도와 우편저금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나 국제우편 이용의 확대 역시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이용 증대에 의한 것이었다.

한일합방 후 10년에 걸쳐 실시됐던 무단통치는 3·1운동을 계기로 누그러졌다. 1920년부터 1931년까지는 소위 문화통치(文化統治)가 전개된 시기였다. 이 기간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언론 및 사회단체의 활동을 허용하는 등 유화정책을 표방했는데, 이는 민족저항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다. 이러한 계략에 말려들어 일부 민족주의자가 친일파로 변절하면서 문화통치정책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우정사업도 식민지 통치체제로 정착되어 갔으며, 이 시기 일본의 독점자본을 침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기관의 확충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통신권을 강탈할 당시 전 체신관서 수가 445개소에 불과했는데, 1930년에는 858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체신관서 수 증가는 일본 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떨어진 수치였다. 게다가 체신관서의 중요한 직책은 일본인이 독점하고 한국인의 진출을 제한하는 차등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1931년에 일으킨 만주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기까지 15년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한 시기였다. 이때 일제는 한민족에게 전쟁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면서 보다 강한 억압정책을 펼쳤다.

우편저금의 경우 정액저금제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저금제도를 통해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해 1941년에는 1억원, 1943년에는 2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했다. 간이생명보험은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일제가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당초 적립금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이용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침략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쟁비용으로 충당했다.

5. 制 3 期 (1945~1961년)

8·15 광복의 해인 1945년 8월부터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1년 말에 이르는 이 기간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에서 재건기 내지 복구기에 해당된다. 8·15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6·25전쟁에 이르는 1940년대 후반은 일제의 식민지 지

바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통신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바쁜 시기였고, 이어지는 1950년대는 3년에 걸친 6·25전쟁으로 파괴된 통신시설을 복구하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다. 광복 당시 692개국이던 남한의 우체국 수는 복구가 마무리된 1960년에 691개국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 기간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자립기(自立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광복 당시 우정사업과 전신·전화사업으로 이루어진 통신사업은 그 역사가 60년이나 됐음에도 자립할 기회가 없었다. 우리나라 우편의 창시자인 우정총국 총판 홍영식은 갑신정변에 연루되는 바람에 우편사업을 개시한 지 20일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 11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이 기간에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 설치된 전신사업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1895년 농상공부 통신국에서 재개한 우편사업은 1900년 통신 전문기관인 통신원이 발족해 운영을 전담하면서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나, 1905년 일본의 강요로 《한일통신기관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통신권을 빼앗기게 됐다. 그후 8·15광복까지 40년 동안 우리나라 통신기관은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됐다.

1945년 8·15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 분단과 극심한 이념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일본인 퇴거에 따른 통신 수요의 급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일본인 철수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이었다.

일제강점기 통신사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됐으며,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중요한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했고 한국인은 요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위상으로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기밀을 요하는 전신·전화나 국제우편 분야에서는 하급직까지도 한국인의 참여가 배제됐다. 일제말기에는 한국인 직원 수가 일본인에 비해 2.5배나 많았음에도 소관 업무에 정통한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일본인이 철수하고 업무를 인수받은 한국인 간부들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여럿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모아가며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은 대부분의 통신시설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체신부 역시 전란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체신사업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전선의 이동과 함께 체신관서의 소개(疏概)에 힘쓰는 한편, 피난 내려온 체신종사원을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야만 했다. 일부 통신요원들은 군대와 행동을 같이하며 전쟁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신업무에 적극 지원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에는 군사우체국을 설치해 국군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

다. 6·25전쟁으로 그동안 남북간 유일한 대화통로였던 남북우편물(南北郵便物)교환은 중단됐다. 3년에 걸친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休戰協定)이 체결되면서 종식됐으나, 그 피해는 매우 컸다. 통신시설의 80%가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따라서 전후 우정사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복지구의 우체국을 정비해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었다. 업무재개 여부는 우체국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랐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업무를 재개한 우체국은 1951년 6월 15일에 문을 다시 연 광화문우체국이었다.

6·25전쟁 때 청사가 불탄 서울중앙우체국은 광화문우체국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광화문우체국은 서울중앙우체국 청사가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업무취급을 중단했다.

1952년 9월 17일에는 서울체신청이 서울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고, 그 동안 서울체신청에 흡수되어 업무를 중단했던 대전체신청이 분리되어 12월 1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철도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1953년 6월 1일에는 서울철도우체국이 피난지 대전에서 서울로 복귀했다. 부산에 피난해 있던 체신부 본부가 서울로 복귀한 것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였다.

통신시설이 복구되고 우체국 업무가 정상화됨에 따라 우편업무 개선에도 힘써 1956년 이후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우편요금별납, 내용증명, 접수시각증명, 통화물품등기 등 각종 특수취급우편제도가 단계적으로 부활됐다. 또한, 국제우편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1955년 8월 서울국제우체국을 신설했고, 그 밖에 이동우체국 개설, 서울중앙우체국의 야간업무 취급 등 서비스 개선에도 힘썼다.

1960년 2월에는 새로운 우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체의 잔재를 청산하려던 광복 이후의 숙원을 이룰수 있었고, 이어 각종 우편 관계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이에 항거해 일어난 4·19민주혁명 이후의 사회혼란은 체신사업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체신사업은 5·16군사정변 이후에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6. 制 4 期 (1962~198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1월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KT)이 설립되기 직전인 1981년 12월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나라 통신역사에서 발전기에 해당된다. 이때 우리나라 통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1962년 1월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에 성공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한국 경제는 연평균 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70년대로 이어지는 제3차 및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도 고도성장은 지속되어 제3차 기간에는 9.7%, 제4차 기간에는 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00달러를 넘어섰다. 체신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통신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234억원을 투자했고, 제2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685억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제2차 기간에 제1차 기간에 비해 3배나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통신 투자비가 확대됐음에도 총 투자비의 90%이상이 전기통신사업에 투입됐다. 이 기간의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은 전기통신사업 위주로 전개된 것이었다. 이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전화공급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음에도 이 기간 우정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우정사업 분야 통신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우체국 수는 1961년의 771개국에서 1981년말에는 2115개국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정사업 성장의 척도인 우편물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직전해인 1961년에 1억 5,704만 통이던 것이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1971년에는 5억 8,337만 통으로 3.7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1981년에는 10억 9,377만 통으로 6.9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우편물 이용량도 6.3통에서 18.5통, 다시 29.2통으로 증가 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우편물도 크게 늘어 1961년 306만 통이던 것이 1972년에는 1,460만 통으로 4.8배, 다시 1981년에는 2,219만 통으로 7.2배 증가했다.

이 기간에 우체국이 급증한 것은 1961년 말에 실시된 별정우체국제도 덕분이었다. 별정우체국은 개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일종의 사설우체국이었다. 국가가 설치해야할 우체국을 개인이 설치하도록 한 것은 투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1962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의 우정사업 목표는 1면 1국주의(一面一局主義)달성이었다. 그때까지 3개면에 1개국 풀인 우체국 수를 1개면에 1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우체국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함으로써 통신 혜택을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리게 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었다.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체신부가 신설하기로 한 우체국수는 903개국이었었는데, 실제

로 세워진 우체국수는 933개국으로 30개국이 더 늘어났다. 그중에서 체신부가 직접 투자해 설립한 우체국은 90개국에 불과하고, 민간인이 투자해 설립한 별정우체국이 843개국이나 됐다.

이와 같이 1961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5년동안 기존 우체국 수보다 10%나 많은 별정우체국이 세워졌기에 우체국 수가 급증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는 별정우체국제도의 도입 외에도 매일배달제, 우편번호제 실시, 우편작업 기계화시도, 우편물 운송 시스템 개편, 우편법 개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특기할 것은 우편번호제 실시와 우편작업 기계화 시도였다.

우편번호란 우편물의 행선지를 숫자로 부호화한 것인데, 이 제도는 우편물 구분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70년 7월에 실시했다. 이는 원래 우편작업 기계화를 전제로 고안해 낸 제도인데, 그해 4월 서울중앙우체국에 설치한 컨베이어 시스템이 자주 고장을 일으킨 데다 우편물 운송작업에는 도움이 됐지만 우편물의 구분작업에는 쓸모가 없어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초기 우편번호제는 우편작업 기계화보다는 우편물의 수작업에 의한 구분에 도움이 됐다.

이 기간 우정사업은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으나, 1950년대와 비교한 상대적 의미의 성장일 뿐 선진 외국의 우정사업과 비교하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통신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체신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과 비교해도 매우 차이가 많았다. 게다가 우정사업의 성장속도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상당히 둔화됐다.

사실상 이 시기 우정사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도성장에서 소외됐다. 통신사업의 투자재원이 대부분 전기통신 부문에 집중된 결과였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이 시기 우정사업은 양적인 면에서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룩과 동시에 1면 1국주의의 완성, 우편번호제 실시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이룩해 우정사업이 급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7. 制 5 期 (1982~2000년)

한국전기통신공사(KT, 이하 한국통신)이 발족한 1982년 1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한 2000년 7월에 이르는 이 기간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에서 전환기 내지 도약기에 해당된다. 급격한 변화의 기간에 우리나라 통신은 도약의 길로 매진하게 된다.

한국통신의 발족이 신호탄이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통신이 설립되면서 전화의 대량공급체제가 갖추어졌다. 그 결과 1980년대 10년간 연간 100만대씩 공급하면서 전화

사업이 안고 있는 최대 과제인 전화 적체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동시에 전화교환방식을 기계식에서 전자교환방식으로 전환해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하나, 변화를 몰고온 사건은 데이터통신 전담회사인 데이콤(DACOM)의 설립이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새로운 통신방식인 데이터통신을 제공하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문이 열렸다.

한국통신이 발족하고 전기통신사업이 분리되면서 우정사업 개혁은 불가피했다. 우선 만성적인 경영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했다. 그동안은 고질적인 경영적자를 한집 살림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의존할 수 있었으나, 그 사업이 독립해 나갔기에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었다.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산해진 우체국 창구였다. 일반적으로 우체국 창구는 우편창구와 전신전화 창구로 나뉘어 있었는데, 전신전화업무가 한국통신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를 절반이 감소하게 됐다. 취급업무를 절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입도 절반이상 줄어들게 됐다. 한산해진 우체국 창구업무를 활성화하지 않는 한 우정사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환경 변화를 예상한 체신부는 우체국의 종합봉사창구화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입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민원우편, 특급우편, 전자우편, 특산품우편주문판매 등 각종 새로운 우편체도를 개발하고 재산세, 전화료, TV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고 복권, 열차표, 고속버스표 등을 판매했다. 1977년 농협으로 이관했던 체신금융사업도 부활시켰다.

1980년대에 체신부가 개발하거나 도입한 제도 중에서 가장 성과가 큰 것은 체신금융사업의 부활이었다. 체신부가 체신금융사업을 다시 취급하기로 한 것은 우정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였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재무부는 우체국에서 예금업무를 재개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체신부는 우체국에서 국공채를 판매해 준다는 조건으로 재무부의 양해를 이끌어냈다. 그리하여 1982년 12월에 제정한 법률이 체신금융사업의 모법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러 시행규칙까지 제정함으로써 1983년 7월1일부터 체신금융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체신금융사업의 부활은 비단 우정사업의 적자를 메울 뿐만 아니라 전신전화업무의 분리로 한산해진 우체국 창구업무를 활성화했다.

1980년대로 접어들자 도시의 팽창과 신도시의 등장등으로 우체국 수요는 증가했지만 투자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민간자본의 유치로 우체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실

시하고 있는 우편취급소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우체국 수를 급증하게 했다. 우편취급소는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으로는 이미 별정우체국이 있었는데, 우편취급소는 집배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창구업무만 취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로부터 우체국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다는 차이점도 있다.

우편취급소는 1983년 12월 최초로 문을 연 이후 1992년까지 10년동안에 총 1,016개소가 설치됐는데 그 중에서 272개소가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았다. 개설한 지 10년이 채 안된 시점에 신설된 우편취급소의 4분의 1이상이 스스로 문을 닫은 셈이다.

우편집중국 건설도 이 기간 동안 빼놓을수 없는 업적이었다. 우편집중국은 각 우체국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한데 모아 소인하고 구분하는 작업을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각 우체국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과정을 기계화한 것으로 1990년 7월 서울우편집중국이 개국하면서 기계화국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어 1996년에는 서울 광진구에 동서울우편집중국을 건설해 서울시내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분담해 처리했다. 동시에 정보통신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 1개국씩 건설한다는 원칙 하에 2003년까지 31개 우편집중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데 그 뒤 2014년 현재 건설된 것 역시 31개국이었다.

1980년대는 우편제도의 개발 연대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우편제도를 개발했다. 1981년 10월에는 국내특급우편제도를 실시했고, 1982년 1월에는 봉사행정의 표본으로 칭송 받은 민원우편제도를 실시했다. 1984년 1월에는 고속통신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우편제도를 실시했고, 1986년 12월에는 농어촌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우편으로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특산품우편주문판매제도를 실시했다. 경조엽서와 광고우편엽서제도도 신설했다.

1984년 2월에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편지봉투 및 우편엽서의 가로쓰기를 실시했고, 우정사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체신 CI를 제정했다. 1982년 12월에는 매월 말일을 ‘편지 쓰는 날’로 정하고 범국민적인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국 200여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우체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1999년에는 우체국 택배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우편 세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만국우편연합(UPU) 서울총회의 개최였다. 1994년 8월 서울코엑스(KOEX) 전시장에서 제21차 UPU총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UPU 서울총회에는 189개 회원국 중에서 172개국 대표, UN등 20개 국제기구대표, 국제사무국 직원 등 2000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는데 회의 기간이 무려 24일이나 됐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는데 체신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국제회의를 무난히 치렀다.

서울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5년 동안 UPU 관리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어 UPU 서울총회 의장 권영수가 2년 임기의 ‘UPU 미래에 관한 고위그룹’ 의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이 기간에 국제우표전시회인 ‘필라코리아(PHILAKOREA)84’ 에 이어 ‘필라코리아 94’ 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개막이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화 사회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인터넷과 휴대전화 시대가 개막되면서 정보화사회는 가속화됐다. 정부는 1994년 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했다.

정보통신부가 발족하면서 우정사업경영체제의 공사화 작업을 서둘렀다. 정보통신부는 공시설립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공사화 작업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1995년 12월 정보통신부 장관이 바뀌면서 공사 설립 작업은 중단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해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1996년 9월 우정사업경영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서둘러 특례법을 그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때 우정사업의 경영 형태는 공사가 아닌, 정부기관 형태를 유지하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8. 制 6 期 (2000년 7월 이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가 발족한 이후부터 현재(2015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우정사업의 독자경영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1월 한국통신의 발족으로 전기통신사업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우정사업은 독자 경영을 했다고 할수 있으나, 정책기능을 맡고 있는 체신부라는 정부조직 하에 운영되고 있어 자율성이 크게 결여됐다. 특히 1994년 12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부처로서의 정책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정사업의 독자 경영은 불가피 했다. 이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가 발족해 우정사업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우정사업의 경영체제에 대해 계속 국가가 경영할 것이냐, 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이냐, 사업본부제로 전환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공사체제로 방침을 정한 것

은 1994년이였다. 그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우정사업의 경영체제를 공사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체신부는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우정사업 공사화 작업은 가속화됐다.

그럼에도 정부 내의 일부 반대로 우정사업의 공사화 작업은 중단됐다. 그 대신 우정사업은 계속 국가가 경영하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담당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1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정보통신부 기구중 우정국과 체신금융국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편, 금융, 물류, 정보화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독립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던 우정사업의 경영을 우정사업본부에 넘기고 본부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경영하도록 했다. 4만여명의 인원과 3600여개의 관서 및 3조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등 거대한 조직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가 탄생했다.

이 기간 우정사업은 우정사업본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몇 개 부처로 분산됐는데,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됐으나 우정사업 운영 형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후 2013년 1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로 발족했으나, 우편사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2000년대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크게 발달했고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새로운 통신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통신의 영역이 한층 넓어지고 편리해졌다. 반면 전통적인 통신 방식인 우편이나 유선전화 등은 상대적인 열세를 면할 수 없었다.

인터넷 등 대체통신의 발달이 우편에 미치는 영향은 우편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유지하던 우편물의 증가율이 2003년으로 접어들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편물 중에서도 인터넷의 영향을 쉽게 받는 통상우편물 증가율은 뚝 떨어졌다. 소포우편물은 꾸준히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통상우편물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인터넷 등의 영향을 덜 받는 특수통상우편물은 한자리 숫자의 증가율이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통상우편물의 감소 추세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치국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체국 중에서도 우편취급소 설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편취급소 설치 수의 대폭적인 감소로

나타났다. 2002년까지 꾸준히 두자리 숫자를 유지해온 우편취급소 신설 수가 2003년부터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다.

우편취급소의 설치수가 급감한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취급소 신설을 억제하기 때문이었다. 우편물량의 감소로 우체국 감축문제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우편취급소 신설 억제는 불가피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6월 우정사업본부직제가 제정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우정사업본부직제』를 제정했다.

이는 그해 3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우정사업 조직의 설치 및 분장 사무를 별도의 직제로 정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게 되어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2000년 7월 초대 본부장 이교용과 함께 출범해 2014년 현재 제7기에 이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매년 흑자경영을 이룩하며 탄탄한 경영을 해왔다. 제6기에 해당하는 2012년에는 5,657억원의 사상 최고 흑자를 기록하며 15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실시한 2013년도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의 일반행정서비스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택배서비스 부문에서도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우정사업은 전국을 구석구석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우편망과 4만여 명의 직원, 108조원에 이르는 자산과 연 매출 19조원을 올리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편물이 감소하고 있고 택배와 금융사업에서도 경쟁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있어 사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 2절 고성지역의 통신 발달사

경남 고성지역의 근대통신은 1905년 5월 29일 경남 고성군 동읍면 남문내동에 고성임시우체소가 개소한 이후 1906년도 통감고시 제101호에 의해 1906년 12월 1일 고성우편취급소로 변경되어 고성지역에 근대통신이 시작되었다. 이후 1907년 9월 5일 자석식 전화 교환업무가 개시되고 이어 동년 9월 21일 공중전화업무 취급을 개시하여 운영하던 중,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전화교환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1951년 6월 9일 전화교환업무를 재개

하였다. 1971년 1월 29일까지 자석식 전화로 사용하다가 1971년 5월 31일 전신전화분실(현 고성우체국)을 신축·이전하여 고성읍 지역만 공전식 전화로 개통하여 운용 중이었으나 통신의 발달과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1981년 12월 31일 제5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설립,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발족 등으로 도래한 1990년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위한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고성우체국은 2001년 12월 10일 각 읍면단위에 흩어진 집배업무를 고성우체국에서 일괄배달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성전화국에서도 시설 중, 장기계획을 수립 1986년 4월 20일 관내 12개 우체국에서 자석식 전화로 교환하던 것을 고성전화국으로 수용하여 자동식 광역화를 개통하였으며 이때 하이면은 주민 생활권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삼천포 전화국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보험업무는 1929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주관하여 시행한 『조선간이 생명보험』이 시발이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보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세민을 위한 소액, 무진자, 월납 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시행된 이 제도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수행과정에서 일본에 악용되어 보험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이후 해방과 6·25동란으로 한 동안의 공백이 있던 후 1952년 『국민생명보험법』이 제정되어, 1953년부터 보험업무를 재개하였으나 돌연 1977년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계약이 농협에 이관되어 청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982년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83년 7월부터 체신보험으로 개칭되어 세 번째 출범을 하여 체신보험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체신예금 역시 1982년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83년 7월부터 실시되어 전국 단일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금융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의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적된 예금고는 체신보험 적립금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지역경제 개발에 이바지 하여 오고 있다.

제 3절 고성우체국

소재지 :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25번길 30 (성내리 2-17)

연 혁

- 1905. 5. 29 : 고성임시우체소 개소 (고성읍 성내리 128)
- 1949.11. 22 : 고성우체국으로 명칭 변경
- 1971. 5. 31 : 고성우체국 전신 전화분실청사로 이전(현 청사)
- 1983. 1.1 : 한국통신 고성전화국에 전신전화업무 이관

● 1983. 7.1 : 체신보험업무 개시

3. 주요현황

(표 1)고성군 관내 우체국 현황(2014년 12월 현재)

국명	소재지	설립년월일	직원수	취급업무
계			92	
고성우체국	고성읍 중앙로25번길30	1906. 12. 1.	53	우편
고성거류우체국	거류면 거류로 648	1912.3. 11.	3	체신예금
고성회화우체국	회화면 배둔로28번길 6	1932.4. 1.	3	체신보험
상리우체국	상리면 척번정1길 95	1934.3. 26.	3	우편환
고성동해우체국	동해면 동해로 1572	1964. 12. 20.	3	우편대체
영오우체국	영오면 영산1길 18	1945.2. 20.	3	공과금수납
고성삼산우체국	삼산면 미룡2길 42	1966. 12. 1.	3	(국고대리점)
고성대가우체국	대가면 대가로 551	1964.7. 1.	3	※각국 공통
고성구만우체국	구만면 영희로 1770	1960. 12. 31.	3	
고성하이우체국	하이면 공룡로 7	1964. 12. 10.	3	
고성하일우체국	하일면 자란만로 1723-44	1965. 11. 15.	3	
고성영현우체국	영현면 고봉로 619-10	1965. 12. 15.	3	
고성개천우체국	개천면 옥천로 1275-1	1966.9. 1.	3	
고성마암우체국	마암면 옥천로 251	1966.11.15.	3	

(표 2)고성군지역 우편물 취급 상황 (단위: 천통)

연도	총계			일반통상		등기통상		우체국 택배	
	계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2007	8,541	2,946	5,595	2,660	5,194	170	283	116	118
2008	8,087	2,849	5,238	2,556	4,815	171	292	122	131
2009	8,121	2,599	5,522	2,314	5,058	168	322	117	142
2010	8,382	2,515	5,867	2,217	5,392	176	329	122	146
2011	8,080	2,394	5,686	2,071	5,195	181	332	142	159
2012	6,975	2,227	4,748	1,897	4,251	176	336	154	161
2013	7,304	1,991	5,313	1,643	4,800	162	335	186	178
2014	7,173	1,886	5,287	1,564	4,759	157	345	165	183

(표 3) 고성우체국 역대 국장 재임 현황

직급	성명	재임기간	직급	성명	재임기간
행정관	윤상갑	1945.11.23~1949.6.10	행정사무관	지하중	1983.5.1.~1984.12.31
행정사무관	최재관	1949.6.11~1960.6.29	행정사무관	이영우	1985.1.1.~1987.1.15
사무관	서정숙	1960.7.2~1961.6.28	행정사무관	하덕문	1987.1.17.~1988.7.19
사무관	박말갑	1961.6.29~1964.6.12	행정사무관	정사환	1988.7.20.~1990.1.7
사무관	서달인	1964.6.13~1965.5.20	행정사무관	조대순	1990.1.8.~1992.1.31
사무관	서정숙	1965.5.21~1967.3.9	행정사무관	곽수근	1992.2.1.~1993.10.31
사무관	서달인	1967.3.10~1968.5.18	행정사무관	조성현	1993.11.1.~1996.6.14
사무관	조정래	1968.6.17~1970.2.4	행정사무관	김정태	1996.6.15.~1998.9.13
행정사무관	김한승	1970.7.7~1970.9.19	행정사무관	김봉래	1998.9.14.~2001.3.31
행정사무관	오재철	1971.1.14~1973.6.11	행정사무관	공종수	2001.4.1.~2002.6.23
행정사무관	장무현	1973.6.12~1974.10.21	행정사무관	박태민	2002.6.24.~2003.12.31
행정사무관	주진수	1974.10.22~1976.2.26	행정사무관	박용광	2004.1.1.~2006.12.31
행정사무관	서해곤	1976.2.27~1979.5.9	행정사무관	오후기	2007.1.1.~2009.7.14
행정사무관	심원구	1979.5.10~1980.11.5	행정사무관	하수환	2009.7.15.~2012.6.30
행정사무관	정충균	1980.11.6~1983.4.30	행정사무관	박경현	2012.7.1~현재

(표 4) 일제 강점기 고성우체국 관련 신문 기사 자료

신문사	발행일자	제목	내용
동아일보	1925. 1. 16	구포(龜浦)고성(固城)에 전화(電話)	경남 구포 급(及) 고성의 시내전화(市内電話)는 2월중에 교환(交換)을 개시한다더라.
동아일보	1925. 1. 29	시내전화개통	경남 고성군은 해륙의 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교통도 점차 편리하게 되어 상업상 유망(有望)한 곳으로서 동군 시내는 매년 호수가 증가되고 변화하여지므로 일반은 시내전화 가설을 하기로 한 후 지난 20일에 공사를 마치고 25일 오전 11시에 동 우편소내에서 개통식을 거행하고 식을 종료한 후 등옥여관(藤屋旅館) 내에서 대성황의 연회가 있었다고.
동아일보	1934. 2. 9	우편소 신설, 고성군 상리에	고성군 상리면은 통신의 불편이 막심하여 5년 전부터 고성우편소에서는 상리주재소에 집배구(集配區)를 설치하고 우편물을 취급하여 왔으나 그 역시 불완전하므로 동면 면장 이용년(李鎔年)씨는 지방유지와 협력하여 우편소 설치를 목적으로 3년간 운동을 지속한 결과 금년에 도의 인가를 얻어 동면 오산리에 우편소를 신축키로 되었는데 오는 3월 12일부터 사무를 개시하리라 한다.